

반유신투쟁의 전개과정

정 윤 광

*정윤광님은 민청학련 사건시 서울대학교 철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었으며, 1975년 석방 후 노동운동에 투신,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노조운동으로 해고되었다가 2003년 서울지하철공사에 복직되었다.

박정희 일당의 군사쿠데타

1960년 4월 민주혁명으로 이승만 독재는 무너지고 부패와 빈곤, 탄압으로 신음하던 국민대중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정권을 세우고, 자유와 개혁, 진보의 새 역사를 새롭게 세워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민주적 개혁과 진보의 역사는 시작된 지 1년여만인 1961년 5월의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군부 야심가들은 이승만 정권 말기에 1인 장기독재와 부패, 빈곤 척결을 명분으로 군사반란을 기도하려 음모하였으나, 4·19 민주혁명으로 이를 실현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후 호시탐탐 반란의 기회를 노려 오다가, 이승만 독재정권 타도 후의 개방적·민주적이고 자주적·진취적인 사회분위기를 사회혼란으로 몰아붙이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미국의 승인 아래 집권하게 되었다.

쿠데타 정권은 4대 의혹사건 등 쏟아지는 의혹사건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민정이양 형식으로 치룬 1963년 대선에서 승리, 집권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박정희 독재정권이 저지른 부정 부패 반민주적 범죄에 비하면, 1963년과 1967년의 대선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공정했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 독재정권을 몰락시킨 4·19혁명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어리석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장기집권의 야욕에 눈이 어두워서 두 번에 걸친 개헌을 통해 반민주적 범죄를 저지르

면서 우리 역사를 더럽히게 된다.

박정권은 1971년 두 번째의 임기 종료를 앞둔 1969년에 협박 공갈로 3선개헌을 하고, 1971년 대선에서는 총체적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을 조작하였다. 선거기간중 동대문 공설운동장의 유세에서 “이번 한번만 하고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고 유세장에서 눈물로 호소하던,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박정희 일당은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체제 구축 음모에 돌입하였다.

1971년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재정권의 학원병영화를 위한 교련(강화)반대 투쟁과 학생·청년 민주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부정선거 반대투쟁이 거세게 타올랐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학생시위가 확대되자 1971년 10월 15일 서울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 대학에 휴업령을 내리고 병력을 진주시켜 학생시위를 진압하였다. 그리고 23개 대학 117명의 학생을 제적, 강제 입영시켰다.

12월 6일에는 이에서 더 나아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철권통치를 더욱 강화하고, 전 국민을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박정희 군사독재는 1972년 7월 4일 북한과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남북공동성명을 발표, 마치 민족의 열망인 통일을 추구하는 듯이 국민을 기만하고는,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부실덩어리가 된 기업들을 8·3조치로 사채를 동결함으로써 구제한 이후) 10월 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한 것이었다.

유신체제는 동서고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제체제였다. 유신체제의 최고 의결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 기만적 관권선거로 선출된 2,359명의 대의원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여기서 선출하고 헌법 제정과 개정도 여기서 결정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독재자의 거수기에 지나지 않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장충체육관에서 선출된 5년 임기의 대통령은 무제한의 연임이 가능하였다.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원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다시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을 제·개정하게 한 것은 사실상 순환논법에 의해서 박정희 독재자의 영구집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유신체제는 국회와 사법부 역시 대통령의 통제 아래 두었다. 국회는 대통령이 임명,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는 독재자의 거수기 3분의 1의 의원과 한 선거구에서 (여야 각 1인씩) 2명씩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의 손아귀에 쥐어 있었다.

유신체제는 국민의 인권과 정치적 권리를 극도로 억압하는 전체체제였다.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는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에게는 소위 안보의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유에 의해서도, 즉 구실 붙이는 대로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 긴급조치를 거면 증벌에 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유신체제는 독재자가 무한대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였다. 독재자 박정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 위에 군림, 국민을 억압·착취하고 지배하는 체제였던 것이다.

‘짐이 곧 국가요 하느님이요 염라대왕이니라.’

74년 4월 민청학련 투쟁으로 구속되었을 때, 나의 항소이유

서의 한 구절이다.

유신체제는 인권을 말살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항상 군과 경찰의 폭력과 중앙정보부, 보안사의 고문과 투옥의 공포 속에 떨게 하는 체제였다. 실제로 1972년 10월 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한 이후 수많은 학생, 종교인, 민주인사와 선량한 국민들이 구속되어 고문당하고 감옥에서 형을 살았다.

독재자의 피살

유신체제 이후 학생,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등의 많은 저항이 있었다. 이 저항을 박정희 전제정권은 1, 4, 5, 9호에서 12호에 이르는 많은 긴급조치를 남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제압하였다. 그러나 권력의 흑심한 탄압은 오히려 폭력에 의존하여 유지해 가는 정권의 불안과 동요의 표현이었다.

박정희는 1974년 민청학련투쟁을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여 대량 구속과 중형 선고, 소위 인혁당 관련자에 대한 사형집행 등 폭압적으로 진압하고 정권을 계속 유지코자 하였다.

탄압이 심하면 국민의 저항도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인권을 압살하고 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유신체제가 국민의 저항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유신체제의 서슬 푸른 칼날 앞에 숨을 죽이던 국민들도 마침내 강력한 저항의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맞선 민청학련 투쟁 이후 각계각층, 전 국민의 반유신투쟁은 불꽃이 터진 것처럼 밀려 나왔다. 종교인, 학생, 지식인, 언론인,

정치인 등등의 반유신투쟁이 거세게 일어났다.

박정희 독재자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재일동포 문세광의 저격을 받았으나 처 육영수를 희생양으로 삼아 암살은 모면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국민의 저항에 시달리다가 1979년 9월 YH신민당사 농성투쟁과 10월 부마항쟁을 폭압적으로 짓밟은 직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비참히 피살되고 말았던 것이다.

영원히 권좌에 있을 것 같던 박정희도 1977년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차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코미디같은 선거에서 당선된 후 제2기 임기도 다 못 채우고 비명에 갔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유신체제 몰락 후 민주화를 바라는 전 국민의 열망을 짓밟고 학생과 언론인, 민주인사의 투쟁을 억압하고, 수많은 국민을 학살하면서 광주민중항쟁을 진압, 집권한 전두환과 노태우 군사정권이 다시 10여년간 지속되었다.

유신체제는 전 국민에게 엄청난 위압으로 다가왔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체제 선포 이후 서슬 푸른 전제의 폭압 앞에 전 국민은 숨을 죽였다. 치열하게 싸워왔던 학생들의 저항도 한 동안 멈추었다. 그러나 압제에 대한 침묵은 오래 가지 않았다.

1972년 8·3사채 동결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투성으로 취약한 한국경제는 비틀거렸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1973년 여름에는 한국 정부(정보부)에 의한 김대중 납치사건이 터져 민심이 흔들렸다.

반유신 민주화투쟁의 봉화를 처음 치켜 든 것은 서울 문리대 학생들이었다. 1971년의 10·15 위수령 발동과 12월 6일 비상사

태 선포와 함께 그 해 학생운동 주모자 수백명의 제적과 군 강제 입영에도 불구하고, 서울 문리대 학생들은 그 이후 내부 운동역량을 착실하게 강화해 왔었다.

학생운동 서클들을 통합, 공개조직과 비공개조직 2원화 체제를 구축하고, 공식 학생회를 장악하여 공개투쟁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울 문리대 학생운동 역량은, 여름 농촌 참여활동 시기부터 가을 학기에 유신반대 민주화투쟁을 위한 집회시위투쟁을 전개키로 비밀리에 논의를 모아갔다.

마침 여름방학 기간에 터진 김대중 납치사건과 유가폭등 조짐으로 인한 경제파탄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신반대 투쟁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었다.

서울 문리대 학생운동가들은 1973년 10월 초 유신독재 반대, 민주화, 경제위기 해결,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규명, 중앙정보부 해체 등을 내걸고 집회시위투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투쟁은 1단계 유신반대투쟁으로서, 전면적인 유신 철폐보다 낮은 수준의 유신독재 반대 민주화를 요구키로 하였다.

4학년과 3학년이 투쟁의 주요 역할을 맡고, 복학생을 포함해서 전 역량이 적극 참여키로 하였다. 형태는 기습적인 집회, 시위로 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학내 집회에도 경찰병력이 즉각 투입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1단계 투쟁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어 분위기를 고양시킨 후 다음해 1974년 봄에 2단계 유신반대투쟁, 즉 전면적인 유신철폐투쟁을 전개키로 하였다.

집회 시위를 준비하는 한편으로 서울법대와 상대, 의대, 공

대, 농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대, 건대 등 서울 시내 각 대학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함께 투쟁할 역량들을 조직해 들어갔다.

1973년 10월 2일 서울 문리대 정문 앞에서 600여 명의 학생들이 집결하여 유신독재반대 민주화를 외치면서 집회 시위를 개최하였다. 집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예상대로 박정희정권은 1시간 이내에 경찰병력을 교내로 투입 진압하였다.

그러나 이 집회시위는 엄혹한 유신체제 아래서 그 체제에 당당하게 정면 도전함으로써 유신체제의 위세를 일거에 부수어 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 집회 시위투쟁은 서울과 지방의 대학으로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갔다.

집회 시위의 열기가 드높아 가자 민주인사들과 종교인들도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침묵하던 언론도 1단에서 2, 3단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동아일보」의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언론자유화 움직임이 일기도 하였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유신반대 집회시위 발생 즉시 경찰력을 투입하여 진압하고, 주동자를 구속하는 등 강경 탄압으로 대응하였으나, 짧은 기간에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의 대학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학생들의 투쟁을 저지할 수가 없었다.

당황한 정부는 마침내 유화책으로 돌아서서, 12월 초 이미 구속하였던 나병식, 정문화, 도종수(당시 서울문리대 학생회장), 김병곤 등 시위 주동자들을 석방하고, 인양로 등을 수배해제함으로써 분위기를 무마시키고자 하였다. 김종필 총리를 내세워서 학원자율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초점을 벗어난 것이었다. 학생들의 투쟁



▲ 10월유신 선포 발표

은 학원자율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고, 그것으로 멈출 것도 아니었다. 이미 점화된 유신반대 민주화투쟁의 불길은 어설뿐 정부의 유화책으로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의 후퇴는 학생들에게 더욱 승리감과 자신감을 부여하였고,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항쟁의 의지를 강화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반유신투쟁의 분위기는 넓게 또 깊숙하게 확산되어 갔다.

서울 문리대를 중심으로 한 반유신 학생투쟁의 '중심'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학생들의 반유신투쟁 역량들을 조직화하고, 전 학생운동세력을 중심으로 청년진영과 기독교·가톨릭 등의 종교인, 지식인들을 광범위하게 묶어서 봄 개학 시기에 맞추어 제2단계의 반유신투쟁, 즉 전면적인 유신철폐투쟁을 전개키로 하였다.

전 사회적으로 고양된 반독재투쟁의 분위기를 유지 강화시

켜서 대대적인 집회와 가두시위투쟁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1 단계 투쟁의 중심에 섬으로써 이미 노출된 나병식, 안양로 등은 2선으로 물러서고, 아직 노출되지 않은 이철 등 2학년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1973년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고양된 반유신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 동안 박정희 군사독재에 지속적으로 항거해 왔던 장준하, 백기완씨를 중심으로 재야인사들의 유신헌법에 대한 개헌청원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박정희정권은 지체치 않고 (1974. 1. 8) 유신헌법에 반대하거나 개헌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금지하고, 군법회의를 설치, 이를 위반할 시에는 15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긴급조치 1호를 선포하였다(2호도 함께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경제적 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군사독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장준하, 백기완씨 등의 개헌청원서명운동은 당연히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구속되어 군사법정에서 1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진홍, 이해학 등 민중선교를 하던 진보적인 기독교 전도사 6명 또한 공개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모두 구속되어 10~1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유신철폐투쟁의 본격화

3월 개학 이후 본격화할 유신철폐투쟁을 위한 전국적 조직화 작업과 그 투쟁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갔다. 투쟁의 조직화 사업은 10·2 문리대 집회시위투쟁을 시작으로 1973년 가을 이후의

반유신투쟁을 주도한 서울 문리대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73년 가을 투쟁의 성공으로 서울 문리대 '중심'의 권위는 전국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정되었다.

1973년 가을 투쟁시에 이미 조직화되어 있던 각 대학 역량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1973년 가을 투쟁에 집회 시위로 참여했던 전국 각 대학의 역량들을 조직화하고, 1973년 가을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전에 학생운동을 주도하였던 역량도 조직해 들어갔다.

학생운동 출신 청년 역량들도 연계 조직화하고, 기독교·가톨릭 등의 종교운동 역량들과 사회 민주운동가들과도 연대하고, 야당 일부 세력(김영삼)에도 반유신투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 연계해 들어갔다. 그리하여 반유신투쟁을 위해 당시의 학생운동 전 역량이 참여하고, 민주화운동 역량의 대부분과 연계 협력선이 구축되었던 것이다.

나중에 명칭에서 단순히 '학생' 조직이라고 하지 않고 '청년'을 붙여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투쟁의 이슈는 '유신헌법 철폐, 새로운 민주헌법 제정'을 핵심으로 해서, 노동3권 보장, 농민생존권 보장 등 당시 석유파동 이후 경제적 위기와 민중의 삶의 파탄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제국주의에 종속·지배당하고 있는 민족의 자주적 요구를 결합시키기로 하였다.

당시 학생운동의 당면 과제는 유신 파쇼 폭압체제를 철폐하고 새로운 민주체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투쟁의 본

질적 성격은 유신 철폐 민주운동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모순은 동시에 유신체제를 중심으로 구축된 지배계급과 민중의 모순 및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 하에 있는 민족적 모순이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중은 아직 정치적·조직적으로 이러한 모순을 척결할 투쟁의 주체로 나서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학생 청년운동이 이러한 민중의 요구를 가지고 선도적으로 투쟁해야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선언문 「민중·민족·민주선언」과 「민중의 소리」에 반영되었다.

1971년 10월 15일 위수령 발동,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대량 제적 및 강제 군 징집 이후 강화되어 온 군부독재정권의 탄압과 감시는 1972년 10월 17일 유신체제 선포 후에 더욱 삼엄해졌다. 조그마한 저항에도 검거와 투옥이 잇달았다.

유신파소체제에 대한 저항은 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 보안사에 끌고 가 고문을 일삼고, '북괴'를 이롭게 할 이적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로 조작해서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중형을 선고 투옥하였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민우지 사건' '검은 10월 단 사건'과 전남대학교의 '녹두회' 사건 등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저항의 목소리는 숨을 죽였다. 취중에 말 한마디 잘못하여 잡혀 들어가는 막걸리 반공법 위반사건도 이때부터 빈발하기 시작하였다.

유신 파소체제의 긴급조치 아래 중앙정보부와 경찰의 감시와 미행, 탄압은 실별하였다. 1974년 3월 개학 이후 학생들의 반유신 전면투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감지한 정보기관의 학생역량에 대한 미행과 감시가 대단히 심해졌다.

투쟁을 중심에서 계획하고 이끈 학생들은 정보의 종합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임(조직)의 단위를 최소한의 것으로 줄였다. 모임(회의)의 개최 회수도 최소화하였다. 모임의 구성도 3~5인으로 최소화하여 5인을 초과하면 둘로 나누었다. 다수가 만나거나 회의 형태로 모이는 것을 줄이거나 피하고, 일상적으로는 1대 1의 접촉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정보를 전달하였다. 가명을 사용하거나 만나는 일시 등에 간단한 암호를 사용하였고, 연락이 끊어질 것에 대비하여 2중으로 연결 가능한 선을 확보하였다.

최소한의 조직적인 구조는 중앙(서울 및 수도권), 영남, 호남 3권역 대표 모임과 서울대, 고대, 연대, 성대, 이대 등 서울 소재 5개 주요 대학 대표 모임 및 서울대 각 단과대학 대표모임 등이 있었다.

서울대 모임은 보안상 문리대, 법대, 상대, 사대 등 문과계와 의대, 공대, 농대 등 이과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모임 단위의 중앙 연락 책임자는 황인성, 김병곤, 정문화가 맡고, 이 3인과 총 책임자인 이철로 총괄 조정하는 중앙모임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인 구조 이외에 비공식적인 의사 결집과 침투 역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소위 제2선으로 일컬어지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조직의 명칭 결정과 투쟁 이슈의 최종 결정은 최대한 뒤로 미루었다. 그것은 논의과정의 필요보다도(주요 이슈와 전술에 대한 이견은 처음부터 거의 없었다) 보안 유지를 위해서였다.

분명히 유신체제 철폐투쟁을 위한 조직은 존재하였다. 유신 철폐투쟁이 알려진 바와 같이 투쟁내용과 전술(투쟁시기와 방법

등)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일반적이고 상설적인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당면 투쟁을 위해서 필요한 수준으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당시 유신 파쇼의 고도의 정보정치, 폭압통치 속에서 상설적인 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적합치 않았고, 다음 단계의 조직은 운동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적합하게 구성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인식되었다.

당시 운동의 수준과 이를 탄압하는 정권의 정보능력을 감안할 때, 반유신 집회시위가 터지면 이를 주도하는 중심역량은 노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었다. 파쇼정권은 자신에게 정면 도전하는 운동 역량에 대해, 정권의 총력을 기울여서 어떠한 사악한 방법도 피하지 않고 색출 검거할 것이 분명하였다.

파쇼정권의 검거·투옥으로 한 시기 투쟁을 주도한 ‘중심’이 무력화되었을 때, 이후의 투쟁을 다소 안정적인 입장에서 이끌어 갈 역량의 배치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중심역량의 큰 부분을 제1선에 배치하고, 그 일부를 제2선에 배치,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제 1선, 제 2선의 구분과 역량의 분할배치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비밀조직과 활동에 익숙치도 철저치도 못하였을 뿐더러 긴급조치 1호 하의 엄혹한 탄압 상황에서 대중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의 운동역량마저 두려움을 가지게 됨으로써 역량을 1차 시기의 투쟁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973년 12월 초순에 예상하였던 1974년 봄의 반유신투쟁은, 전국적으로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학원가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두 세 차례 선도적인 집회와 시위를 배치, 분위기를 고양하고, 역량을 강화한 다음, 일정 시점에서 일시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 가두시위에 나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긴급조치 1호 발동 이후에 탄압의 강화와 대중적 분위기의 침체에 따라, 즉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전술의 수정이 필요하였다.

유신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이 파쇼정권의 폭압적이고 신속한 탄압을 받으리라는 것은 원래 예상되었던 것이다. 억압에 짓눌려 숨죽이며 살아 온 학생과 민주인사, 민중의 반유신투쟁이 일어나자 드디어 박정희 파쇼정권은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이를 압살하려 하였다.

이 협박은 일반 대중에게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긴급조치 1호의 선포와 이에 저항한 장준하, 백기완씨 및 6명의 소장 전도사에 대한 10~15년의 투옥과 중형 선고로 두려움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왔다. 대중의 투쟁 열기는 상당히 가라앉았다.

그러나 긴급조치라는 서슬 퍼런 칼을 휘둘러댄다고 해서 유신파쇼체제에 대한 저항을 압살할 수는 없었다. 협박 공같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마주 서는 자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그 칼은 순간에 나무막대기 하나만도 못한 것으로 무력화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어쨌든 이제는 대대적인 시위와 집회를 통해서 거리를 휩쓰는 상황은 어려워졌음에 틀림없었다. 보다 결연한 투쟁이 요구되었다. 짧은 투쟁 시기에 전 운동역량을 집중하여 집회 시위를 성

공시키는 것이 중요하였다.

강력한 역량을 가진 곳(학교)에 선도투쟁을 배치, 단위의 역량을 총집중하여 하나의 집회시위 투쟁을 성공시킴으로써 긴급 조치의 위세를 박살내고, 대중의 두려움을 걷어내어 대중이 동참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집회시위 개최를 성공시켜 위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였다(이것은 1973년 10·2투쟁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었다).

선도적으로 감행되는 학생들의 결연하고 위력적인 집회시위 투쟁이 성공하면, 이어서 전국의 광범위한 학생들과 민주인사, 종교인, 언론인, 정치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유신철폐투쟁에 대한 지지와 동참이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러나 한 시기의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 투쟁의 주된 목표인 유신 철폐를 이루기 어려우리라는 것도 분명하였다. 그러나 설혹 혹독한 탄압이 가해지더라도, 수백 수천명이 체포 투옥되어 중형을 살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들과 각계각층의 저항이 계속될 때, 아무리 유신파쇼가 탄압의 칼날을 휘둘러댄다고 하더라도 머지 않아 그 탄압은 무력화되고 말 것이었다.

박정희 파쇼정권은 유신헌법 개정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에도 15년의 중형을 때렸다. 학생들이 유신헌법 철폐를 외치면서 유신 체제에 정면 도전하여 일어설 때 주동자는 최소한 15년 이상 사형까지 선고할 것은 훗하게 보였다.

그러나 유신철폐 학생투쟁을 주도하는 학생들이 사형까지 포함하는 중형을 선고받고 수백 수천명이 투옥될지라도, 학생 대중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과 광범위한 민중이 이를 지지해 일어

섬으로써 길어도 3년 이내에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당시의 학생들은 확신했다.

학생운동 역량들은 유신철폐투쟁의 대의에 대한 헌신과 그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조금도 두려움없이(평온한 마음으로) 일여섯던 것이다.

유신철폐투쟁의 승리

1974년 봄(3, 4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유신철폐 집회시위투쟁은 전술적인 과오로 기대했던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역량이 가장 강한 서울의 한 대학에서 선도투쟁을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전파, 짧은 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동시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전술을 취하지 않은 데에 있었다.

대중적 분위기도 낮고 투쟁역량도 약한 경북대에서 3월 21일 집회를 개최케 되고, 집회가 힘있게 개최되지 못한 것이 전국투쟁 분위기를 고양시키기보다 오히려 침체시키게 되었다. 연이어서 진행된 서강대, 연세대의 투쟁도 대중집회, 시위로 끝나지 못함으로써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운동의 '중심'에서는 투쟁역량을 총동원하여 전국 동시 집회시위를 개최기로 결정하고 실행하였다.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여 4월 3일 전국적인 동시 집회시위를 개최기로 한 것이었다. 이 집회시위 역시 위력적이지는 못했다. 서울 의과대학과 성균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대중적인 집회(교내)시위를 성공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선 학생들의 결연한 유신철폐투쟁은 박정희 파쇼정권을 혼란과 광포함으로 몰아넣었고,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반유신투쟁은 곧 바로 유신체제를 철폐시키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유신체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여 유신체제를 저승사자에서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그 위용을 깨부수어 버렸다.

과도하게 중형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긴급조치 1호, 4호는 무력화되어 1974년 8월 23일 해제되었고, 박정희 파쇼는 이를 형량을 낮춘 긴급조치 9호로 대체하였다. 중형을 받은 학생들과 민청학련 관련자의 대부분은 구속된 지 1년이 안된 1975년 2월 15일에 석방되었다.

확산되어 불타오르는 범국민적인 저항과 박정희 유신파쇼의 폭압에 대한 세계각국 민중들의 투쟁과 각국 정부의 항의에 박정희 파쇼정권은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박정희 파쇼는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조작, 실시하여 어쭙잖은 명분을 세우고는 구속 학생 등 민청학련 관련자들을 석방하는 한편, '복괴'의 지령을 받아서 민청학련을 배후조정하는 것으로 조작한 소위 '재건기도 인민혁명당'의 중심 인물 8명을 1975년 4월 9일 잔혹하게 학살하고 말았다.

진정 민청학련투쟁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역사에 그 의의가 올바르게 자리매김되려면 박정희 파쇼의 광포한 탄압에 의해서 억울하게 조작되고 학살된 '재건 인민혁명당' 인사들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후에도 계속된 학생들과 민중의 줄기찬 투쟁으로, 유신체제는 5년이 경과된 1979년 10월 박정희 독재자가 살해당하면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체포와 재판경과

1974년 4월 3일 10시 전국의 수많은 대학에서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집회시위가 개최되었다. 집회 시위가 어려운 곳에서는 「민중·민족·민주 선언」과 「민중의 소리」 등 선전물의 배포가 이루어졌다.

3월 21일 경북대, 3월 28일 서강대, 4월 1일 연세대의 반유신 시위에 이어서 4월 3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터져 나온 반유신 투쟁에 정부는 크게 당황하였다. 대단히 치밀한 조직적인 항쟁으로 파악하였던 게 틀림없다.

4월 3일 오후 황급히 정부는 긴급조치 4호를 발동 '민청학련'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였다. 유신헌법 또는 긴급조치 4호 자체에 반대하거나, 민청학련에 소속되거나 행동하는 자뿐만 아니라, 민청학련에 소속 또는 이에 관련된 자를 도와주는 자(행위)도 사형에까지 처한다는 무지막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정보 치안에 비상이 걸렸다. 민청학련 관련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전 정보기관, 검찰, 경찰 인력이 전면적으로 투입되고,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인 호구조사가 이루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민청학련 관련자들이 검거되었다. 긴급조치 4호의 규정에 의해서 민청학련 관련자의 조사, 검거, 수사는 중앙

정보부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주동자들은 경찰에서 조사하지 않고 신분 확인 후 즉각 중앙정보부 제6국이나 지방의 대공분실로 압송되었다.

중앙정보부 남산 지하 취조실에서는 20일 이상 수사관의 취조가 진행되었다. 취조기간 동안 계속 수사실에 수감하였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각본대로 날인하고 사건이 꾸며질 때까지 진술서를 무수히 반복하여 작성케 하였다. 귀, 다리, 허리 가릴 것 없이 무수히 폭력이 가해졌다. 통닭구이, 물고문, 전기고문 등이 짐승처럼 행해졌다.

이리하여 정부는 4월 26일 “조총련과 ‘재건 인민혁명당’을 통해서 ‘북괴’의 지령을 받아서 폭력적 시위 등의 방법으로 내란을 일으켜서 정부를 전복하고 적화를 기도”한 것으로 민청학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 달 후인 5월 27일에 1차로 주모자급 54명을 기소하였다.

4월 말쯤 되자 당시 독립문에 위치한 서대문구치소는 민청학련 관련 학생 등 1천 여명이 들어차서 빈 자리가 없었다. 1사에서 16사동까지 1층과 2층의 반은 민청학련 관련자들로 가득 찼다. 공간사범은 각 사동 1층과 2층에 각기 방 하나씩을 띄어서 수감하였다.

민청학련 관련자에게는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체 외부 접촉이 금지되었다. 가족까지 포함해서 일체 면회도, 편지도 금지되었다. 심지어는 감방에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서적의 반입도 금지되었다. 다만 1심 재판이 끝나자 성경과 불경같은 종교서적의 반입이 허용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2심 재판 종료 후에 극히

제한된 수준에서 도서의 반입이 이루어졌다. 철저히 외부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이 이루어진 것이다.

재판은 군법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군 검찰관과 재판관, 변호사 이외에 피고인에게는 1인씩만 직계가족 방청이 허용되었다. 재판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뒷자리에 앉아 감시하고, M-16을 집총한 채로 재판정을 에워싼 헌병원들의 감호 아래 진행되었다.

유신체제 긴급조치 아래 군법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비밀(비공개)재판이 진실을 어떻게 밝히겠는가?

재판은 인정신문 이후에, 소위 ‘재건 인민혁명당’ 관련자(21명)와 민청학련 관련자를 분리해서 진행하였다.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받은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200여 명이다. 이들은 몇 차례로 나누어서 재판을 진행하였다. ‘민청학련 사건’ 주모자들 1진 32명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은 각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 두 차례의 심문, 한 차례의 구형과 최후진술, 그리고 선고였다. 판결문은 검찰공소장과 꼭 같은 내용에 형량은 검찰구형과 꼭 같이 사형으로부터 15년 징역에 15년 자격정지의 중형이 떨어졌다. 예상했던대로였다. 소위 ‘재건 인혁당’ 관련자들을 제외한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이후 국방부장관의 형 확정 과정에서 사형이 무기로 낮추어졌다.

재판을 받는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당당하였다.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신파쇼정권을 심판한다는 생각으로 여유있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오히려 초조한 것은 박정희 유신독재권력이었고, 그 하수인 중앙정보부 관계자와 군 검찰관, 재판관들이었다.

재판과정에서는 사건이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온갖 비인간적 고문으로 조작되었음이 폭로되었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20일 이상 잠을 안 재우고 구타와 물고문, 통닭구이, 전기고문 등 온갖 고문을 통해서 사건이 각본대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학생들의 시위 집회를 반란이요 폭력혁명 기도로, 유신철폐 민주화투쟁을 위한 학생 세력의 연대를 조총련과 인민혁명당을 통해서 북괴의 지령을 받는 반국가단체로, 주도자들을 반국가단체 수괴와 간부로 몰아나가려는 재판의 진행에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어이없어서 웃었다. 재판을 조롱하고 희화화하여 재판과정을 코미디로 만들어 버렸다.

특히 최후진술 기회는 바로 박정희 유신파쇼와 그 하수인들을 심판하는 장이었다. 이철은 “지금 당신들이 우리를 재판하지만 당신들은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김병곤은 “사형이 영광이다. 당신들이 나를 사형시킨다면 그것이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면 당당히 사형을 받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이외에 “사건을 고문으로 조작한 것이다,” “사형을 구형받지 못한 것이 후배에게 죄송스럽다,” “한때 수사과정에서 유신반대를 부인하였던 것을 참회한다” 등 피고인으로 선 민청학련 관련자 전원들이 역사와 민중 앞에 당당하고 정의로움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고, 어떠한 희생도 무릅쓸 의지와 각오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 밑바탕에는 또한 자신들의 투쟁이 광범위한 민주인사와 국민들의 분노에 점화하여, 거대한 반유신 투쟁의 파도를 만들고 마침내는 승리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1심 재판이 끝난 후 이 조작된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음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1심 재판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2심 재판은 거부하고, 이러한 조작된 재판의 실상을 바깥에 알리기 위해서 모두가 무기한 단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단식투쟁은 그 내용을 밖으로 알리는 통로가 여의치 않다는 김지하 선배의 요청을 받아들여(그와 나는 1사상 다른 방에 있었다. 단식에 놀란 교도소측의 협조를 받아서 김지하 선배와 내가 교도관실에서 만났다) 이틀만에 중단하였지만, 너무 쉽게 중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단식 중단 지침은 한 방 건너 민청학련 관련자들이 있었으므로 통방을 통해서 알려 주었다)

2심은 심리없이 단 한번 선고로 끝났다. 이러한 졸속 재판의 소식을 전해듣고서 2진으로 재판을 받은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재판정에 들어서자마자 애국가를 불러서 재판을 부정해 버렸다.

2심 재판이 끝나고서 안양교도소로 모두 이감되었다.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함이 명백하였다.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소위 인민혁명당 관련자를 고려하여, 즉 그들이 고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재판투쟁을 계속 진행키로 한 1진 30여 명을 제외하고, 그 외에 200명에 가까운 전원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모두 5~15년(1명은 무기)의 형이 확정되었다.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재판에 참여하였던 변호사와 가족들 및 이들과 접촉하였던 친구·기독교 인사들을 통해서 민청학련 투쟁의 진실이 차츰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북괴의 지령을 받는 반국가 단체가 내란을 계획하였다는 터

무니없는 조작과, 이를 조작하기 위해 가해진 비인간적인 혹독한 고문의 실상,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당당함과 진실과 정의에 헌신하려는 행동과 의지의 실상이 알려지자 서서히 구속자 석방 요구와 함께 유신을 반대하는 투쟁이 확산되어 갔다.

먼저 가톨릭 신부와 수녀, 신도들이 미사와 행진을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이 목요기도회 등 각종 기도회와 집회 시위를 가졌다. 민주인사들도 성명서를 내고 집회를 개최하였고, 학생들도 다시 집회시위를 조직하였다. 야당(당시 신민당)에서도 김영삼이 유신반대를 내걸고 8월 당 총재선거에서 당선되는 등 투쟁에 동참하였다.

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 민중이 광범위하게 투쟁에 동참하였고, 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하여 세계 인권단체들도 한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구속자 사면운동과 반유신투쟁에 가담하였다. 미국 등 각국 정부의 압력도 강력하였다.

1974년, 8·15 기념식장에서 유신 폭압에 저항하는 재일동포 문세광의 총탄에 부인 육영수를 희생양으로 보내고, 박정희는 피살을 모면하였다.

가을이 되면서 구속자 석방과 반유신투쟁은 국내외로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다. 동아일보 등 기자들도 공정보도투쟁과 자유광고투쟁(1975년 3월 사주에 의해서 해고된 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위를 조직하여 투쟁함)을 전개하였다.

박정희 유신파쇼의 조작과 기만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박정희 독재자의 영구집권과 민중에 대한 폭압의 본질도 폭로되었다. 더 이상 탄압으로서는 타오르는 항의와 투쟁을 억누를 수

없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압제에 대한 국내외의 가열찬 투쟁과 항의에 박정희 정권은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5년 2월 12일, 박정희 정권은 국민투표 쇼를 통해서 유신 체제를 유지키로 확인하고, 1975년 2월 15일 민청학련 관련자들 대부분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하였다.

파쇼정권은 명분을 세우기 위해 소위 '재건 인민혁명당' 관련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대법원까지 재판을 무리하게 단기간에 강행하여 1975년 4월, 대법원 선고 후 즉시 8명에 대해 다음날 사형을 집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내란음모의 조작

민청학련 주모자들에게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및 그 수괴 또는 간부의 임무에 종사), 형법 위반(내란예비음모 및 선동), 반공법 위반(북괴에 동조, 찬양, 고무) 등이 적용되어 최고 사형에서 최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민청학련 관련자로는 1심 군법회의에서 6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국내외의 항의에 밀려서 국방부장관 확인과정에서 여정남씨를 제외하고는 전원 무기로 감형되었다. 이미 말한대로 '재건 인민혁명당' 관련자는 1심에서 7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잔혹하게 집행되었다.

1974년 4월 26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달 후인 5월 27일에는 1차로 주모자 54명('재건

인혁당' 포함)을 기소하였다. 검찰 기소장, 1심과 항소심의 군법회의 판결문, 1975년 4월 7일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의 내용도 중앙정보부 사건 발표와 꼭 같았다.

그 요지는 “이철, 유인태, 김병곤 …… 정운광 등이 반국가단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결성하고, 이철을 수괴로 하고 유인태, 김병곤 …… 정운광 등은 그 간부를 맡음으로써, 1974년 봄 전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집회 시위를 개최하여 거리를 휩쓸고, 화염병, 폭약 등으로 폭력시위화하여 무법천지를 조성하고, 이 시위의 와중에서 새로운 혁명 지도부를 선포, 정부를 퇴진시키고 단계적으로 적화혁명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는 것이었다.

민청학련은 또 반국가단체인 ‘재건 인민혁명당’과 조총련을 통해서 북괴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재건 인민혁명당’은 경북대 중퇴자인 여정남을 통해, 조총련은 일본인으로서한국 파견 기자인 다찌카와와 하야카와를 통해 민청학련의 수괴인 이철과 주요 간부인 유인태와 접촉, 지령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유신체제의 반민주적·반민중적 본질, 그 반동적·폭압적 성격과 이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일어난 민청학련 투쟁의 정당성은 지금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역사적 공헌과 의의는 아직도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현재 진행중인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작업이 이를 위한 조그만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민청학련 투쟁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오늘 법리적 논란을 벌이고는 싶지 않다. 그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의미있는 일도 적절한 일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거시적 관점에서 당시 상황의 흐

름을 살펴봄으로써 그 정당성에 관해 밝혀 보고자 한다.

유신체제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 박탈하는 반민주적 체제이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법 위에 둠으로써 입법권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구성도 대통령의 손아귀에 넣고, 대통령의 명령으로 군법회의를 설치하여 통상의 사법기구를 무력화하는 등 대통령의 명령이 초헌법적 권능을 갖는 체제이다.

유신체제는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짓밟는 체제이다. 헌법 자체와 대통령의 명령 또는 긴급조치로서 자의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고 박탈하거나 짓밟을 수 있다. 유실파쇼는 중앙정보부와 경찰, 보안사 등 정보기구를 이용해서 국민을 감시, 공포의 정보정치를 하였다.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인권을 박탈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민주적인 파쇼체제에 국민은 참을 수 없어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유신체제 아래서 치열한 저항이 계속됨으로써 박정희 파쇼는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1호에서 12호까지 무수하게 남발하면서, 학생, 민주인사, 종교인 등 수많은 국민들을 체포·구속·고문하여 고통을 가하였다는 것은 새삼스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유신체제는 또한 헌법 자체에 의해 순환론적으로 박정희 독재자 1인의 영구집권을 가능케 하는 반민주적 체제요, 역사를 후퇴시킨 반동적 폭압체제임도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유신체제 자체가 반민주적 폭압체제일 뿐만 아니라 그에 근거하여 발동된 긴급조치 4호는 소위 '민청학련' 관련자를 도와준

사람조차도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졌었다. 민청학련 투쟁을 탄압 조작하기 위해서 정권의 모든 권력장치와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비공개(비밀) 군법회의에서 어떠한 진실이 밝혀질 수가 있겠는가? 재판은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뒤에서 감시하고 M-16을 집총한 헌병들이 삼엄하게 경비하는 속에서 진행되었다. 피고인의 직계가족 1인과 변호사만이 재판정에 입장이 허용되었다.

기록을 위해 중앙정보부의 인가를 받은 군법정 보도진 2명(사진사 포함)이 들어 왔다. 변론과정에서 유신체제를 나치에 비유했다고 해서 강신옥변호사는 법정에서 체포되어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청학련 관련자 대부분이 중앙정보부 지하실의 조사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음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입수해본 재판기록에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상군법회의는 재판기록마저 위조하였던 것이다.

진실은 무엇인가

민청학련투쟁은 폭압적인 유신파쇼를 철폐하기 위해 일어난 학생들의 투쟁이 핵심이요, 그 성격이었다. 그것은 학생들 자신이 계획하고 실천한 자주적인 투쟁이었다.

민청학련이 '재건 인민혁명당'과 '조총련'을 통해 북괴의 지

령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이다. 그렇다고 윤보선 전 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찬국 연세대 신학대학장과 김동길 교수 등이 배후조종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다만 유신철폐 투쟁에 공감하고 지원하였을 뿐이다.

문리대 출신의 학생운동 선배인 이현배, 김지하, 유근일씨 등이 주도하거나 배후조종한 것도 전혀 아니다. 그들 역시 유신철폐투쟁에 공감 또는 동의하고, 조언하거나 지원한 수준인 것이다. 「민중의 소리」를 쓴 장기표 역시 그런 정도로 참여한 것이다. 오히려 학생 역량들이 이러한 재야세력, 종교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유신철폐투쟁에 동참케 하고, 지원을 끌어낸 것이었다.

민청학련 투쟁은 1973년 10~12월 전국 대학에서 들불처럼 타오른 유신반대 민주화투쟁의 2단계 투쟁이고, 전면적인 유신철폐-민주헌법 제정 투쟁으로 나아간 것이다. 1973년 투쟁은 서울 문리대의 10·2 집회시위 투쟁이 기폭제가 되었고, 서울 문리대 운동역량이 중심 역할을 하였다.

1973년 10~12월 투쟁의 성공으로, 이를 주도한 서울 문리대 중심 역량의 권위는 전국적으로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1973년 10~12월 투쟁에 동참하였거나, 유신에 반대해서 투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전국적 학생운동 역량을 조직화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박정희 군사파쇼가 조작한 내용에 의해도 민청학련 주모자들이 북괴의 직접적인 지령을 받았다고는 하지 않는다. 북괴와 민청학련 사이에 '재건 인민혁명당'과 조총련을 개입시켜 이를 매개고리로 북괴의 지령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조총련의 지령을 전달한 자는 일본인 다찌카와와 하야카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 신문·잡지사의 기자에 지나지 않았고, 이철, 유인태를 한 두 차례 만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조총련의 지령을 전달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15년 징역과 15년 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 조작을 규탄, 석방을 요구하는 일본의 여론과 일본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몇 달 후에 석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건 인민혁명당’의 지령을 전달한 것은 경북대 학생운동가 여정남으로 되어 있다. 여정남 역시 이철, 유인태와 2, 3차례 만난 사실은 있다. 그리고 당연히 유신반대 투쟁에 함께 참여키로 하였고, 경북대 역량의 조직화를 도왔다.

그러나 경북대의 조직과 투쟁 책임을 맡은 것은 여정남이 아니라 정화영, 임규영, 이강철이었다. 그리고 유신철폐 투쟁의 중앙이요 지휘부가 있었다면 서울에 있었고, 이미 말했듯이 서울 문리대 학생 역량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경북대는 중앙의 지휘나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었지, 이를 지시 지령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재건 인민혁명당’과 조총련이 상급조직으로 그려져 있고, 윤보선, 지학순, 박형규, 김찬국, 김동길 등이 배후세력으로 그려져 있다. 바로 이것이 이 사건이 조작된 것임을 폭로하고 있다. 국가전복과 적화혁명을 기도할 반국가단체 조직이라면 대단히 체계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직에서는 ‘지시-보고’의 선이 단순 명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발표문에서는 ‘재건 인민혁명당’과 조총련 이중의 선

을 통해 복귀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전직 대통령에서부터 주교, 목사, 대학 학장 등 많은 사람이 배후가 되어 있다. 즉 민청학련은 재건 인민혁명당, 조총련, 재야인사, 종교세력 등의 조직 또는 배후세력의 지령과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후 조종세력들은 정치적·사상적 성향이 또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다. 다만 유신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을 바란다는 점에서만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사건이 대단히 영성하게 조작된 것임을 폭로해주고 있다. 나아가 민청학련이 이러한 다양한 세력과 인물들의 지령과 조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민청학련 중심 역량이 유신철폐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공통된 목적으로 이 다양한 세력들의 연대와 참여,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재건 인민혁명당’의 진상

민청학련 사건의 핵심적인 배후는 ‘재건 인민혁명당’으로 되어 있다. 인민혁명당 재건 기도의 실체가 있는가? 한마디로 박정희 유신파소가 유신헌법 철폐를 외치면서 맞선 민청학련 탄압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만든 허무맹랑한 조작이다.

출소 후 ‘인혁당은 조작이다’라고 동아일보에 글을 신고,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했다고 해서 김지하, 장영달은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7년의 징역을 더 살았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정

권은 한·일 국교를 맺은 후 1964년, 소위 인민혁명당 창립 혐의로 도예중, 서도원 등을 잡아들여 구속 기소하였다. 그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반국가단체 구성은 무죄로 판명되고, 도예중 1명만 반공법 위반으로 1년의 형을 살고 나왔었다.

1974년의 소위 '재건 인민혁명당'은 김용원, 우홍선, 이수병 등 서울 거주자와 서도원, 하재완, 도예중, 송상진 등 대구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감옥생활과 재판과정, 출소 후 접촉과 전문을 통해서 보건대 그들이 당시 인민혁명당을 구성 또는 재건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은 명확하다.

서울 거주자들은 대부분이 단순한 생활인으로 되어 있었고, 교사, 학원 등 생활현장에서 영문도 모르고 불시에 체포되어 왔다. 대구 거주자들은 부분적으로 학생운동가들과 접촉을 갖고 5·1 노동절, 8·15 광복절, 11·3 학생의 날 등에서 학생들의 집회, 성명서 작성을 도와주는 등 꾸준히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져 왔던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민주화운동에 지나지 않았고 사회주의운동도 복귀를 이롭게 하는 행위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고, 민주화운동에 관심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인 것이다.

그들 중에서 일부가 유신철폐 학생운동에 관심을 가졌고 또 공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학생운동의 내용과 전술에 영향을 줄 위치에는 전혀 있지 않았고, 또 그만한 능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당시 운동의 흐름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

었고, 그 상황에서는 학생들 자신이 학생운동을 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민청학련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박정희 군사파쇼가 강제로 끌고 들어와서, 혹독한 고문과 비밀재판을 통해 사건을 조작하고 중형을 선고하여 처형과 장기 투옥으로 혹독한 고통을 주면서 생을 파괴키키고 정권의 희생물로 삼은 것이다.

진상을 밝히는 것은 그들의 억울함을 벗겨내고, 그들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잡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청학련투쟁의 의의를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석방 후의 민청학련 관련자들

유신체제에 이어지는 전두환 군사독재체제도 정보 경찰기관을 앞세운 정보정치, 폭력정치의 기간이었다. 국민의 정치적 권리는 박탈당하고 인권은 무자비하게 짓밟혔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은 이후 군사파쇼정권에 의해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시와 억압, 형집행정지 취소를 통한 재수감의 위협, 사회안전법 발동에 의한 시민권의 제한과 감호초치 등의 위협과 공포가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반국가단체, 내란음모, 반공법 등의 보안사범으로서의 레텔은 정치적·사회적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적 생활조차도 심하게 왜곡시키고 제약하는 굴레로 작용하였다.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대부분 1975년 2월 15일 감옥에서 출소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형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었고,

형집행정지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언제든지 형집행정지를 취소하여 다시 수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파쇼 아래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1975년 6월, 박정희 유신파쇼는 반대자에 대한 탄압수단의 일환으로 사회안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국가보안법, 내란음모, 반공법 위반 사범, 즉 보안사범을 효과적으로 감시, 격리, 감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항상 정보기관의 보호관찰 대상이 되고, 그중 의심되는 사람은 주거제한과 감호조치를 취하였다.

실제로 구 혁신계 일부는 감호처분을 받았다. 민청학련 관계자는 여론이 워낙 거세어서 상당 기간 사회안전법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였으나, 정보형사가 상시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사실상의 보호관찰 처분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의 경우, 1975년 2월 출소 이후 담당자를 지정, 초기에는 상시 감시하였다. 거의 매일 만나기를 강요하였고, 이후 주 1회 면담으로 완화되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월 1회로 축소되었다. 심지어는 1983년 복권 이후에도 1985년 봄까지 계속 감시하였다.

나는 1985년 1월에 서울지하철공사에 입사했다. 그해 봄 서울지하철 창동 차량기지 지역 관할 서울북부경찰서에서 사회안전법 처분관계(처분 등급 결정 등)로 조사받은 후 직접적인 감시는 포착되지 않았고, 만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회안전법 적용이 면제되었는지 어떤지 그 처분결과는 지금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1983년 2월 25일까지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선거권과 피선거권 같은 정치적 권리가 박탈되었고, 공무원 등의 공무담임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 역시 사회정치적으로 커다란 제약이 되었다.

안기부 지하실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공포와 고문의 후유증으로 많은 관련자들이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이상증세를 앓았다. 몇몇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질환 형세를 보여서 치료를 장기간 받았고, 지금도 그 증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유신체제가 반민주적·반동적 파쇼체제요, 이에 정면으로 항거한 민청학련 투쟁이 역사적으로 정당하고, 우리의 역사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민청학련투쟁의 공헌과 그 의의가 제대로 규명, 평가되고, 역사에 올바르게 위치지워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민청학련의 진실을 밝히고 그 역사적 의미를 올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소위 '재건 인민혁명당'의 진상이 바르게 규명되지 않으면, 이와 결부하여 사건을 조작한 민청학련투쟁의 진상도 올바르게 규명될 수 없다. 지금 당장 이러한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고 올바르게 위치지워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명예회복 및 보상' 작업과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이 그 의의를 인정받으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받은 고통과 삶의 왜곡이 조금이라도 보상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작업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